

탄약고가 예술공간으로...캠프 그리브스의 변신

[김민경 기자]

[앵커]

민통선 내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 파주 캠프그리브스가 색다른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곳곳에 분단과 평화의 의미를 묻는 예술 작품들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기를 보관하던 탄약고 문을 열자 뜻밖에도 미끄럼틀과 그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탄약고"가 평화와 놀이의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는 붉은색 풍선을 매달고, 새 생명의 의미로 재탄생했습니다.

정비고와 막사 등을 활용해 DMZ의 역사적, 공간적 특수성을 재해석한 작품들이 미군 반환기지, 캠프그리브스 내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박민호/경기도 파주시: "미군 기지로 쓰였던 곳이 이렇게 전시하는 장소로 새롭게 변화했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구요."]

10명의 작가들은 개성 넘치는 작품을 통해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DMZ 남방한계선에서 2km 떨어진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반세기 넘게 미군이 머무른 곳으로 각종 군 시설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2007년 반환 이후, 최근 안보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캠프그리브스가 "문화예술의 장"으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배수경/경기관광공사 DMZ관광사업팀 과장: "평화와 생태와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고 일반인들에게 전시와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씻어내고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되고자 하는 이 특별한 공간의 전시는 내년 7월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김민경기자 (mkdream@kbs.co.kr)

[저작권가© 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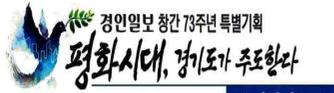
경인일보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003면 종합

파주 - 고성 특구지정 유력... 지역별 특화 상생전략 세워야

<경기도>

<강원도>



통일경제특구

>골·< 특구 대상지에 불리는 관심 점적포함 경기·강원 적극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기도와 강원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문 대통령이 이미 공약을 통해 파주를 통일경제특구 대상지로 제시한 상태이며, 파주시 역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대비해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강원도는 고성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진전되고 남북 제제도 풀리면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가시화될 때 우리 경제 여건상 두 개 지역에 동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특성에 맞춰 통일경제특구를 특화시키거나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22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에서 제시된 경기도 내 통일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파주, 김포, 고양 등이다. 고양시는 자유로와 경의선 등 교통 인프라의 장점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 타당성 용역, 2017년과 올해에는 통일경제특구법안 제정 촉구 심포지엄을

대대통령 공약 파주시 후보 '첫손'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 보상 차원

강원도는 고성·설악산 연계안 제시

선정·배제보다 단계적 개발 가능

개최했다. 고양시 측은 정형동·대화동·송포동 지역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포시는 신규 개발이 가능한 유휴부지가 많고, 한강 하구 물길을 이용해 평화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경제특구 구상을 밝힌 만큼, 파주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인천·개성·해주)를 물류·제조업 중심의 새해안산업벨트로 개발하겠다는 '새해평화협력지대'도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를 파주에 조성될 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하는 '남북

경협벨트' 구상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법안(6건)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이발의원 안을 중심으로 정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파주의 입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파주시는 개성공단과 연계한 LCD 클러스터 조성을 통일경제특구의 구체적인 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고성이 앞장서고 있다. 고성을 언급한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고성에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또한 금강산과 설악산을 묶어 관광을 특화한 경제특구를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는 산업 기능을 특화한 통일경제특구, 강원 고성은 관광을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다. 경기도뿐 아니라 강원도에도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려면 각각 특화된 특구 설치 가능한 만큼, 선정과 배제보다는 우선 순위에 따른 단계적 개발도 가능하다. 통일경제특구 입지는 국회 법안의 정리 과정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법안에 특정 지역을 명시하면서 입지가 결정될 수도 있고, 통일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할 뒤 지역 여론을 수렴해 사·도지사, 통일부, 국도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입지를 결정하는 7가지 방안 모두 가능하다.

/신재경기자 sjr@yeongin.com